

## 지엠 횡포 저지, 노동자 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

4월 18일, 5월 1일 대구모 공동행동... “파산 위기 때 살려줬더니 공장폐쇄와 죽음으로 답하냐”

금속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정 관리, 부도 협박으로 정부 지원과 정리 해고를 강요하는 글로벌 지엠에 맞서 ‘부당수탈 이득 환수와 총고용 보장’을 쟁취하기 위해 전면 투쟁에 나섰다.

금속노조와 74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은 4월 12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지엠 횡포 저지, 노동자 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발족식’을 열고, 노동자 생존과 국가 경제를 지키는 범국민 투쟁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범대위는 지엠 자본과 문재인 정부에 ▲한국 지엠 군산공장 폐쇄 철회와 30만 노동자 총고용 보장 ▲한국지엠 부실화 관련 자료 공개와 부당수탈이득 환수 ▲한국지엠 경영 실사 과정 공개와 이해 당사자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범대위는 부당수탈 이득 환수와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 범국민대회 등 다양한



공동행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노조와 범국민대책위는 한국지엠 사태가 심각해도 문재인 정부가 인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승민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산업은행의 경영 실사가 부실하고 불투명하다. 글로벌 지엠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 절차로 전락했다”라고 꼬집었다.

범대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범국민 실사단’을 꾸려 정부와 산업은행의 실사에 적극 개입하고, 한국지엠 부실의 진짜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

고 밝혔다. 범대위는 한국지엠 전·현직 임직원에게 부실 원인에 관한 제보를 받는 한편, 범국민 제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투쟁 발언에서 “글로벌 지엠은 한국정부에게 노동이 아니라 지엠의 돈을 존중하라고, 동료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인권이 아니라 지엠의 이윤을 존중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라고 분노했다.

이북남 노조 한국지엠 부지부장은 마이크를 잡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이북남 부지부장은 “지엠 자본이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노동자들이 피땀으로 살려냈지만, 지엠은 공장폐쇄와 동료의 죽음으로 대가를 돌려줬다”라고 울분을 쏟아냈다.

범국민대책위는 오늘 4월 18일 한국 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1차 공동행동을 벌이고, 5월 1일 범국민대회를 대구모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중지부, 사측 기습-일방 구조조정 맞서 11일째 단식-농성투쟁

현중 정몽준 자본, ▲노사합의 ▲자구안 초과 달성 ▲부채비율 78% 등 우량 지표에도 구조조정 강행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지부장 박근태)가 사측의 기습 일방 구조조정 강행에 맞서 11일 넘게 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임원들은 4월 3일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식발식을 벌이고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박근태 지부장은 이날 지부 사무실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11일째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4월 3일 사무직 400명, 현장직 2천 명을 구조조정 한다는 공문을 지부에 전달하려다 실패한 뒤, 조합원을 상대로 희망퇴직 공지를 벌이고 있다. 지부는 회사가 내린 구조조정안을 정몽준 자본의 이윤 극대화과 3대 세습을 위해 노동조합을 약화하려는 무분별한 정리해고 인으로 규정하고 거부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회사와 고용인정을

위해 순환취직과 교육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합 의했고 ▲현대중공업이 2016년 차관은행에 제출한 3조5천억 원 규모의 자구안 이행률이 100.5%이고 ▲부채비율을 78%까지 낮춘 상황에서 더는 구조조정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4월 1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 결의를 하고, 사측의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본격 투쟁에 나선다.

# “ 노동부에 노동자 생명 안전 못 말킨다”

노조, 노동부 장관 퇴진 요구 농성 돌입...위험성 평가·공정안전보건제도 노동자 참여 보장 촉구

금속노조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금속노조는 4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산업재해예방제도 무력화 앞장서는 고용노동부 규탄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와 김영주 장관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라며 노동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노조는 농성에 들어가며 ▲작업중지와 해제 기준 준수 ▲사업주 결탁 의심 관료 감찰과 징계 ▲위험성 평가 노동자 참여 보장과 사업장 지도 감독 강화 ▲공정안전보건제도 노동자 참여 보장 ▲독성물질 잔존 PU코팅장갑 사용 노동자 특수건강검진 실시와 사업장 사용 금지 명령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검진 대상 물질 확대 ▲노동자 생존, 안전대책 없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재해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입



한 ‘위험성 평가’가 사업주의 이윤 추구로 유명무실해 지고 있지만, 노동부는 제도개선 은커녕 감독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노동부와 결탁한 사업주가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노조는 한국타이어,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여러 사업장에서 이러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발암물질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노조는 “2012년 고용노동부가 187종의 발암성 물질을 지정했지만, 98종만 작업환경측정 대상으로 지정했다. 노동자가 나머지 89종 발암성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

는 발암물질을 지정하고 관리하지 않는 노동부 행정은 노동자에게 벌이는 사기극이라고 질타했다.

신승민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여는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장을 국정 목표로 삼겠다고 했는데 노동부가 외면하며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정부가 실질 제도개선과 대책 마련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윤중호 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노동안전보건 부장은 “현대차 위험성 평가에 현장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참여하면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음에도 사측은 노조 실행 위원들의 활동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며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 산재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일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현대자동차지부, 사회양극화 해소 특별요구안 결정

11일~12일, 임시대의원대회 열어... “부품사·비정규직 노동자 함께 하는 2018년 단체교섭 투쟁 돌입”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허부영)가 4월 11일, 12일 울산 현대자동차 문화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18년 임금 요구안 등을 확정했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2018년 단체교섭 핵심 요구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하향상박 연대 임금과 사회 양극화 해소 특별요구안’이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다섯 가지 사회 양극화

해소 특별 요구안은 ▲현대차 새내하청 비정규직 임금지상 7.4% 금속노조 산별최저임금 10,000원 이상 인상 ▲현대차 새내외 하도급 물량도급 노동자 최저임금 미달 방지 대책 마련 ▲현대차 납품 계약 현 시간당 임률 18,000원이면 7.4% 19,332원으로 인상(현대차 정규직의 80% 보장)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 ▲현대차 1차 납품계약 업체 통행세(중간착취) 8~15% 근절과 2~4차 하청업체 부당

한 계약 등 공정거래법 위반 근절 대책 마련 ▲최초 납품계약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대책 수립 등이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대대에서 현대차 사측과 보수세력, 언론이 ‘안티 노조 프레임’으로 시적인 사회 고립을 극복하고, 대공장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연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 검찰 과거사위, 유성기업 노조파괴 건 1차 조사대상서 제외

10일 유성기업지회, 즉각 재조사 촉구 결의대회...현대자동차, 유성기업, 창조컨설팅 처벌 등 요구

“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은 과거사이자 현재사입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4월 10일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단이 있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 유성기업 노조파괴 비호한 검찰 규탄, 노동사건 유일한 검찰 과거사 재조사 즉각 실시, 유성기업지회 결의대회’ 를 열고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도성대 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대회사에서 “ 지금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 관련 자료가 300건 넘게 있다고 한다. 방대한 자료만큼 유성기업의 비위행위가 방대하다” 라고 꼬집었다. 도성대 지회장은 “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자료가 많아 1차 조사대상에 선정하지 못했다는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 유일한 노동 사건이다.



신속하게 재조사 해달라” 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엄강민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대회 투쟁사에서 “ 검찰은 유성노동자에게 악랄하고 현대차 자본에는 관대한 조직이다” 라고 비판하며 “ 검찰이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 현대차 자본이 결탁한 노조파괴사건에 관해 재조사에 나서지 않으면 스스로 적폐, 부패세력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라고 비판했다.

이날 대회에 참여한 김선동 노조 쌍용자동차

차지부 조직실장은 “ 논밭이었던 이곳에 건물이 들어서 상전벽해로 변했지만, 유성기업 노조파괴 8년, 쌍용차 정리하고 10년의 고통은 그대로다” 라며 “ 아직 버티고 있는 노동 적폐를 노동자의 단결 투쟁으로 끝장내자” 라고 호소했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검찰 과거사 재조사를 촉구하는 노동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검찰

이 유성기업 노조파괴 행위에 동조한 사실에 관한 즉각 재조사 ▲현대자동차, 유성기업, 창조컨설팅에 대한 처벌 등을 요구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건의 사건 가운데 하나로 ‘ 유성기업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 사건’ 을 선정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을 관련 자료가 방대하다는 핑계로 1차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 “ 레이테크 여성노동자 인권을 긴급 구제하라”

임태수 사장, 감시·폭행·징계협박 반복·노조·레이테크분회, 국가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레이테크코리아분회 여성노동자들이 도를 넘은 임태수 레이테크코리아 사장의 인권유린에 분노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신청을 했다.

노조 레이테크분회 여성조합원들은 4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 레이테크코리아 여성노동자 인권탄압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구제 촉구 기자회견’ 을 열고 “ 임태수 레이테크 사장이 CCTV와 비디캠 등으로 여성노동자들을 불법 촬영하고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등 인권 유린을 하고 있다” 라고 고발했다.

노조와 분회는 “ 레이테크 임태수 사장의 매일 퍼붓는 징계 협박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심리 압박을 주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 기목 ‘ 고용과 관련한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지적했다. 노조와 분회는 국가인권위가 긴급 구제신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회에 따르면 임태수 사장은 비디캠과 휴대폰 등으로 조합원들을 불법 촬영하며 감시했다. 이에 항의하면 “ 젊은 시장의 몸을 만졌다. 더럽다” 라고 큰 소리로 자작극을 벌이며 성적 모멸감을 주

고있다고 한다.

레이테크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포장부를 폐쇄하고 21명의 조합원을 영업부로 강제 발령했다. 40-50대 여성 노동자들은 70일 넘게 본사 출근투쟁을 벌이고 있다. 임태수 사장은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출근 후 분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1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했다. 이에 조합원들이 항의하자 임태수 사장은 여성 노동자 세 명을 폭행했다.